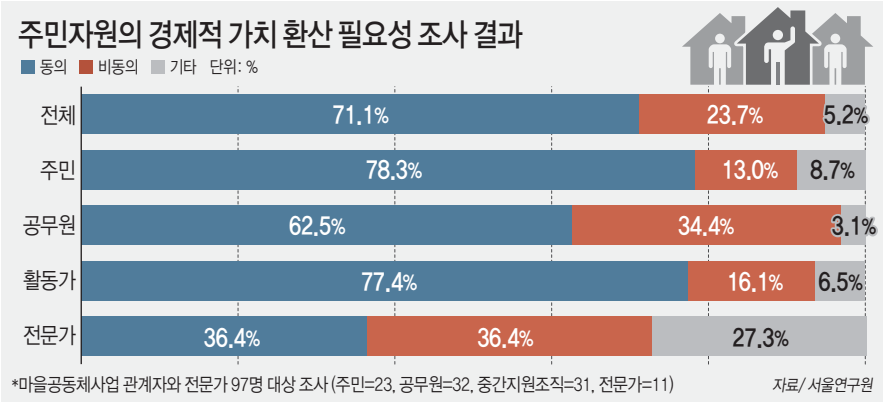
마을공동체 자립성 강화해야… 지역화폐 등 보상 필요

서울시, 9759건 사업 309억 지원
"주민자원의 중요성 느껴" 87.6%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 참가자 수가 22만9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보상을 제공, 주민 자원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누적 참가자 수는 22만9000여명에 달한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들이 제안한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시가 보조금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실시됐다. 시는 2017년까지 총 9759건의 사업을 선정해 약 309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마을공동체사업의 핵심은 '자립 지원'이지만 보조금에 대한 주민 의존도가 높아 지원 종료와 함께 활동이 중단되거나 공동체가 해산하는 경우도 많았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 성과감사 결과'(2017)에 의하면 사업 10건 중 4건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지난 2016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한 1489개 사업 중 662건(44%)이 중단됐다. 중단 사유는 사업비 부족, 사업 종료 후 해산 등인 경우가 53.5%(354건)였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보조금 지원이 주민들의 자립성을 약화한다는 주장과 주민들이 사업에 투입한 유무형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대립해왔다.

서울연구원이 201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마을공동체사업 관계자와 전문가 97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원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6%가 주민자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주민자원의 평가와 활용을 위해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은 71.1%나 됐다.

안현찬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주민자원의 발굴과 활용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며 "주민자원 활용을 촉진하려면 사익 추구와 같은 부작용은 예방하되 실효성 있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주민자원은 ▲자원활동 ▲재능 ▲현물 ▲현금으로 구분된다. 자원활동은 마을공동체사업에 따른 의무활동, 회의, 홍보, 실무, 행정 업무를 말한다. 재능은 마을공동체사업에 필요한 강의, 컨설팅, 기술 등 전문적인 서비스 형태의 기부를 일컫는다.

현물은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기부 또는 무상 대여한 공간, 차량, 물품을 의미한다. 현금은 자부담 사업비 외에 주민이 모금·기부·각출한 현금을 뜻한다.

서울연구원은 마을공동체사업에 보조금보다 더 많은 주민자원이 투입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이 마을공동체사업에 투입된 주민자원의 가치를 분석한 결과 평균 2434만원으로 조사됐다. 사업 보조금인 1139만원의 2.14배에 달한다.

안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조금의 액수를 넘어서는 주민자원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이러한 주민자원이 합당하게 인정받고 활발하게 활용돼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자원을 마일리지나 지역화폐로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개발해 시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만 마일리지나 지역화폐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것은 활용도가 낮아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타임뱅크', 노원구 '지역화폐', 서울시 공동체주택의 '꽁돈' 등 이미 존재하는 시스템과 연계해 구체적인 방안을 개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가을 거리 퍼레이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거리에서 열린 '차 없는 거리'행사에서 롯데월드 어드벤처 공연팀이 퍼레이드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버스 준공영제 손본다… 표준원가제 도입

서울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부족분, 버스회사가 자체 충당해야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손질한다.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 지급 방식을 '표준원가제'로 바꾸고 중대·비리 사고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 외부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을 엄격하게 선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13일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시는 표준원가제를 전면 실시한다. 표준운송원가의 80%를 차지하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에 대해 표준원가를 정해 단가만큼 지급한다. 그동안 버스회사에서 쓴 만큼 시가 실비정산 방식으로 지급해왔다면 앞으로는 부족분에 대해 버스회사가 경영 경쟁력을 높여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성과이윤 지급 대상 업체를 줄이는 대신 경영 성과가 좋은 회사에 인센티브를 확대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한다. 지난해 시는 전체 65개 시내버스 업체 중 54개 업체에 성과이윤을 차등 배분했다. 올해는 45개로 줄인다.

버스 업체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중대한 비리를 저지르거나 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즉시 퇴출한다.

회계·채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업체가 선정하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은 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 선정한다. 감사 범위는 회계에서 인사, 노무 등 업체 업무 전반으로 확대된다.

채용비리를 없애기 위해 '운수종사자 권역별 공동채용'을 추진, 뒷돈 취업 같은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한다.

시는 준공영제 개선과 함께 수요 대응형 노선 신설, 버스 광고 수입 확대 모색, 지문인식 음주 측정 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버스업체 운송 수입을 증대하고 서비스를 향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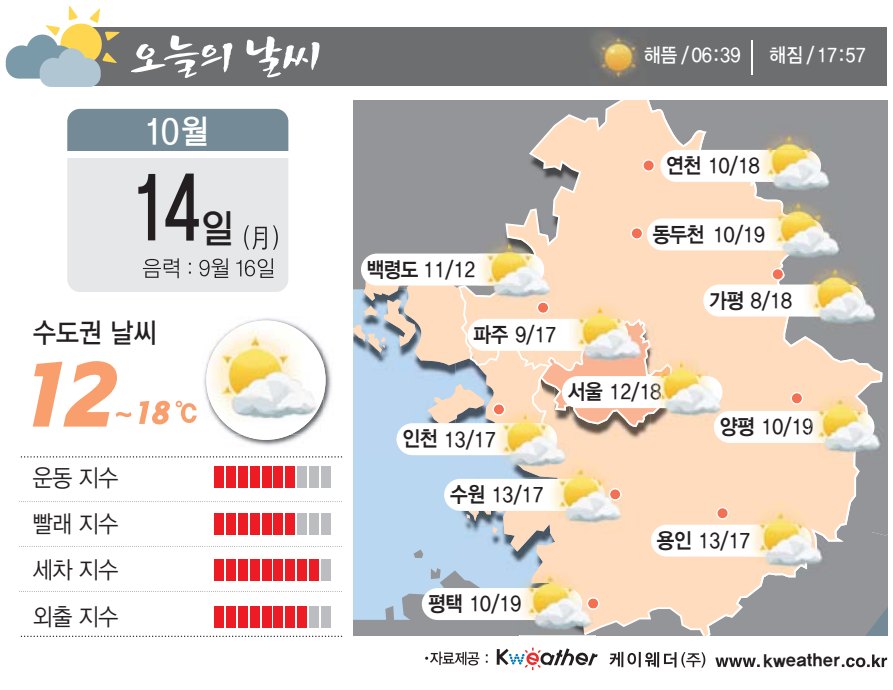
/김현정 기자

장성군, 재정평가 '종합우수' 지자체 선정

장성군이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종합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성군은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대해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행정안전부의 대표적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지자체 규모를 고려하지 않았던 행정단위별(시·군·구) 평가에서 인구·재정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별 평가로 전환했다.

재정건전성 분야와 관련해 장성군은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이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전남)=김태수 기자



서울시, 갭투자 피해예방에 두 팔 걷었다

세입자 알 권리 높이는 대책 중점
공인중개사 책임보장금 2억으로

서울시는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자 방법이다. 최근 갭투자로 주택을 샀던 집주인들이 매매가 하락과 무리한 대출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세입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집주인·중개업자·세입자 간 정보의 불균형이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세입자의 알 권리 강화에 방점을 둔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장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중개대상물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집주인에게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거절할 의무를 신설하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보요구 불응 사실과 이에 따른 거래의 위험성을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최고 자격정지 징계를 부여할 것을 건의한다.

아울러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갭투자 피해 방지 홍보 책자를 제작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배포하고 세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담은 '세입자 권리 보호 안내문'도 연 1회 이상 발송한다.

갭투자 피해 상담 및 문의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세입자는 가급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길 바란다"며 "계약체결 전 갭투자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상담창구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곡성군

신명나는 곡성 '굿보러 가세'

오는 17일 오후 5시 곡성군 레저문화센터에서 2019년 전라남도 도립국악단의 찾아가는 공연 '굿보러 가세'가 펼쳐진다.

공연은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펼쳐지는 만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무대로 구성된다. 국악 장단 또는 가락 위에 대중적 요소를 가미한 창작가요로 시작한 공연은 양 손에 북채를 쥐고 북을 연주하는 진도북춤으로 이어진다. 또한 앉아서 연주하는 앉은반 사물놀이, 한국 전통 기본 춤사위를 바탕으로 구성된 즉흥무 '입춤', 농악놀이의 꽃인 판굿을 선보이는 판굿소고 등 총 7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담양(전남)=김태수 기자 ts7080@